

‘초저전력 반도체칩’ 등 44개 원천기술 개발에 575억 투입

산업부, ‘산업기술 국제공동 R&D’ 예산규모 100억 이상, 최대 5년 소요 MIT·하버드대 교수 등 기관 참여

우리 기업과 노벨상 수상자, 글로벌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고난도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올해 하반기 본격 시작된다. 연구과제는 현존 항암제의 내성·독성문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약, 인간 뇌의 작동방식 그대로를 구현하는 반도체(초저전력)칩,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마지막 관문인 ‘로봇 손’ 기술 등 세계 최초·최고 원천기술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반도체·로봇·배터리·미래모빌리티·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산업 분야 중대형·중장기 산업기술 공동연구개발 공모를 통해 44개 과제를 1차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과제는 예산 규모

국제공동 연구개발 주요 참여기관 현황

주요참여기업	연구소등
삼성디스플레이, 한화, 한독, LG전자HD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HD현대인프라코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올바이오파마, 유진로봇, 동진세미켄, 울촌화학, 서울반도체, 동서기공, 풍산디에이케이, 서울바이오시스, 노루페인트, 오토닉스, 대성주식회사, 나노인텍, 솔브레인홀딩스, 대주전자재료, 아이브이웍스, 뉴로메카, 한국수자원공사, 씨제이케이, 포스코실리콘솔루션 등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단국대부속병원 및 출연연, 전문연 대학 등



자료/산업부

가 100억원 이상, 최대 5년간 소요되는 중장기 중대형 과제로, 공모에 접수된 247개 과제 중 5.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과제다.

선정 과제는 △시력과 청력의 노화를 역전시키는 mRNA 신약(MIT/한올바이오파마) △항생제의 내성·독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약(하버드대/한독) △세계 최고 엔진개발 기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한 초대형 수소엔진(AVL/HD현대중공업) △뇌혈관 시술

을 위한 고정밀 로봇시스템(존스홉킨스/엘엔로보틱스) △차세대 건식 전극 제조 기술(프라온호퍼/나노인텍) △초미세 반도체 제조를 위한 원자수준의 차세대 패터닝 소재·공정(스탠퍼드/동진세미켄) 등 세계 최초·최고 수준이면서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원천기술이 대거 포함됐다.

연구과제에는 MIT, 하버드대, 캠프리지, 스탠포드, 아르곤랩 등 47개

세계 최상위권 대학과 연구기관, 동진세미켄, 한올바이오파마 등 69개 국내 기업, 서울아산병원 등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노벨화학상(2023년) 수상자문지 바옌디 MIT 교수, 노벨물리학상(2014년)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UCSB 교수를 비롯한 미국공학한림원 회원, IEEE(국제전기전자공학회) 석학회원 등 세계 최고 석학들이 다수 참여했다.

산업부는 “국내 상용화 역량과 해외 원천기술의 결합을 통해 미래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차세대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과 글로벌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교류를 지원하는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2027년까지 12개 글로벌 대학·연구소 내에 설립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환경부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

오늘 오후 용산역서 홍보 운동

환경부는 오는 10일 오후 서울 용산역에서 ‘이웃사이(2642) 층간소음 예방 홍보 운동’을 진행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진행하는 행사에서는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을 주제로 문제를 풀면 추첨을 통해 슬리퍼, 도어스토퍼, 의자발커버 등 층간소음 저감 물품을 제공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홍보영상이 방영되고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퍼즐 교보재를 비롯해 층간소음 캐릭터 인형과 사진을 촬영할 기회가 제공된다.

환경부는 전국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를 배포하며, 추석 연휴 기간에 층간소음 민원 접수를 위해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창구도 운영한다. 또한, 어린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제2회 전국 유아·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 이웃사이(2642) 그림 공모전’을 실시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kdh@r

‘스마트축산 관리실태’ 교차점검 실시

농식품부, ICT 등 8개 道 간 진행 이달 10~27일, 도입성과 등 조사 축산장비 적정 설치 등 중점 대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축산 도입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여부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의 성능, 사후관리(AS) 실태 등이 점검대상이다. 특히, 제주를 제외한 전국 8개 도 간 ‘교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달 10~27일 기간 실시하며, 도입성과부터 사후관리(AS) 만족도까지 스마트축산 장비와 운영실태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스마트축산장비 적정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약취저감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도입 성과 ▲설치

장비의 성능과 하자 여부 ▲사후관리(AS) 운영 실태 ▲운영 솔루션 업데이트 및 교육 현황 등이다. 아울러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등을 활용해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운영 노하우 등에 대한 현장 멘토링을 병행 지원한다.

또 각 시도와 협업해 점검대상 64개 스마트축산농가를 엄선했다. 점검 대상 축산농가는 최근 3개년(2021년~2023년)간 스마트축산장비를 설치한 농가 중 축종과 사육규모, 도입정보통신기술(ICT)장비 종류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 점검팀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포함 5인으로 구성된다. 팀장은 각 도 스마트축산 담당자가, 팀원은 시·군 담당자(2명)와 스마트축산 청년서포터즈 등 전문컨설턴트(1명),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 전문가(1명)가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다.

점검은 8개 도 간 ‘순환 교차방식’으

로 진행된다. 이해관계가 없는 타 시도 소속 점검팀이 각 지자체 스마트축산 운영 현장을 점검한다. 특히, 교차점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간 맞교환 방식(예: 경기↔강원)이 아닌 순환 교차방식으로 추진해 점검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했다. 축산농가가 많지 않거나 지역 특성상 교차점검이 여의치 않은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도는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장비 우수 활용 농가를 발굴·소개해 스마트축산 도입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의 성능이나 사후관리(AS) 등이 현저히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요구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스마트축산 보급 사업에서 해당 장비를 제외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지자체와 협업해 스마트축산 도입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축산 도입 농가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김정옥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교차점검은 2014년 스마트축산 보급 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시도된다”며 “이를 통해 시도 간 스마트축산 우수성과와 행정 노하우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안전보건공단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사업 등 추진

안전보건공단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반영해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산재 예방 서비스 구현에 나선다.

9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24개 세부과제 시행이 추진된다. 지난 6월부터 추진과제 발굴을 시작했고, 시민참여 혁신단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말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4대 추진전략은 ▲국민 편의 중심, 산재예방 허브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사업 수행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안전한 산재예방 서비스 환경이다. 주요 추진 세부과제는 50여 종의 지원 시스템을 통합한 ‘산재예방 종합 포털’ 구축,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위험 사업장 예측·분석 및 실시간 안전대책 제공, 사물인터넷(IoT) 기술에 의한 고위험사업장 화학물질 노출수준 실시간 모니터링, 산재예방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 등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해당 과제를 공유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홈페이지·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kdh@

지난달 주택전기로 전년比 평균 7520원 증가

한전, ‘누진제’ 영향에 요금 13% ↑

지난달 역대급 폭염으로 8월 주택 전기료가 1년 전보다 평균 7520원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9일 올해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363kWh(킬로와트시)로 전년동기 대비 9% 증가했고, 전기요금은 6만3610원으로 1년 전(5만6090원)보다 13%(7520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8월 말 집계한 검침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최종 8월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은 9월 말 확정된다.

전기 사용량보다 전기요금 증가 폭이 더 큰 이유는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많은수록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는 누

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300kWh 이하’, ‘300~450kWh’, ‘450kWh 초과’ 등 3단계 구간으로 나눠 사용량이 높을수록 요금 부과금액이 커진다.

1년 전보다 전기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가구는 76%로 파악됐다. 반면 오히려 요금이 감소한 가구는 23%, 변동이 없는 가구는 1%로 나타났다.

한전은 예상보다 전기요금 인상폭이 크지 않았다고 봤다. 한전 관계자는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도 전기 절약을 실천한 국민 노력으로 전기요금 증가가 우려했던 수준보다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내년 총조사 추진 등 5628억 예산 편성

통계청, 서비스 혁신 등 핵심과제 집중

통계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3% 늘어난 562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영향으로 2024년도 예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은 조사 효율화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기본통계인 총조사 실시, 통계 생산·서비스 혁신 등 핵심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가통계의 모집단과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5년 주기 총조사를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결합센서스·전자조사로 조사의 효율성

을 높여 1인가구 및 외국인 증가 등의 사회변화를 적극 반영한다. 농림어업 총조사는 2030년 등록센서스 전환을 위한 행정자료 전수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 스마트농업 등 농·산·어촌의 환경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 관련해서는 정책을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주요 통계를 지속 개선·개발한다. 통계품질에 대해서도 보다 촘촘한 관리를 추진한다. 또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준비하고,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면적조사 표본을 개편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생활인구 DB 구축 등으로 작성체계를 고도화한다.

/김연세 기자